

# '혁신을 넘어, 전주 대도약의 길을 열다'

### 전주시 기획조정실 신년 브리핑 통해 3대 분야 12개 전략과제 제시

전주시가 병연년 새해를 맞아 민선 8기 혁신 성과를 시인 체감형 정책으로 이어가고, 전주의 담대한 미래를 위한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26일 기획조정실 신년 브리핑을 통해 '혁신을 넘어, 전주 대도약의 길을 열다'를 비전으로 한 3대 분야 12개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전주의 대도약을 위한 3대 분야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탄탄한 재정기반 구축 △SI 기반의 디지털 선도 도시 구현 △환경 뉴러는 사람 중심의 포용 행정 등이다.

먼저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예산 집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이울러 전주 대도약 추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강력한 재정 동력을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대외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2026년까지 3년 연속 국가 예산 2조 원대를 확보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를 전년 대비 3% 상향한 2조 3,612억 원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연초부터 국가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금년도 세입목표액을 5,526억으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목표로 세입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전주시는 26일 기획조정실 신년 브리핑을 통해 '혁신을 넘어, 전주 대도약의 길을 열다'를 비전으로 한 3대 분야 12개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활동과 탈루 세원 기획 조사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원주·전주 상생협력사업도 지속 추진하면서 시는 13차에 걸친 상생협력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통합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추진 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간 갈등 없는 화합과 연대의 기반을 마련해 전주 대도약의 지평을 넓혀 나간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AI)과 첨단 데이터가 시장 운영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미

래 지방청 투자를 확대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디지털 선도 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시는 '시민이 잘 쓰는 모두의 AI 환경 조성'을 목표로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역량 교육을 강화한다.

더불어 스마트경로당 100개소와 스마트 지역아동센터 60개소를 거점으로 하는 디지털 교육 및 돌봄 시스템을 완벽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시는 누구나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행정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주 4.5일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도 앞장선다.

시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도 속도를 낸다. 행정·문화·복지 등 공공편익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확대 추진하며, 효저4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평화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각각 2026년과 2027년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금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 확대,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및 민원 사무 처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강화한다. '사람의 가치를 지키는 인권도시 조성'을 위해 '제2차 전주시 인권보장에 따른 2026년 세부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인권도시 기반을 다진다. 시민 대상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조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출연기관·사회복지시설·인권단체 등과 분야별 인권 네트워크를 운영해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은 그동안 준비해온 결실이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주의하세요"

### 전주시보건소, 개인위생 수칙 준수 당부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210개소)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지난해 11월 1주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1월 2주 기준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의 발생 현황을 보이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11월~3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소량의 바이러스로도 감염이 가능하고 전염력이 매우 강한 특징이 있다.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다.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날 수도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



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씻기 △음식 충분히 익혀먹기 △구토·설사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 참여하지 않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 및 출근 자제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 구분 △배변 후 물은 내릴 때 배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SNS 시민홍보단 모집

전주시는 시의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한 후 콘텐츠화해 SNS를 통해 홍보·공유할 '2026 전주시 SNS 시민홍보단'을 오는 2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대상자는 전주에 관심과 애정이 많고 시와 시정 홍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전주·완주에 거주하는 시민 8명이다.

시는 SNS 활동 경력자와 콘텐츠 제작 능력이 우수한 지원자를 우선 선발할 방침이며, 희망자는 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블로그에 게시된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과정을 거쳐 2월 중 선발한 후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선발된 시민홍보단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매월 1건 이상 콘텐츠로 제작하고, 주 1회 이상 시정 소식을 SNS를 통해 공유해야 한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이어간다

###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중 동행 필요한 어르신 대상 지원

전주시가 건강 악화 등으로 병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돕는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를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가 지난해까지 7,200건(누적)에 달하는 등 지역사회의 중요한 돌봄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자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5년 7월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2026. 1. 1.)했다.

서비스는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중 동행이 필요한 사람이 그 대상이

며, 병원 이동부터 접수, 진료, 수납, 약국 이용 및 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이용 희망일 최소 2일 전에는 전담콜(전주지역 1522-4470, 의료사합 221-5454)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또한 1일 3시간(주 1회 한도) 이내로 이용 가능하고 비용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는 무료이나 기초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유료(3만원/3시간)로 이용할 수 있다.

교통비는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동행매니저 교통비 포함)해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23년 7월 병



원동행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4년도 수행기관을 1개소 추가했다.

전주지역지원센터와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업무협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난해까지 누적 실적만 7,200건이 넘는 등 지속적인 희망 수요가 늘고 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수소차 민간구매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가 친환경 교통체계를 가속화하기 위해 수소차 민간구매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총 48억 원을 투입해 수소승용차 30대와 수소고상버스 10대 등 총 40대의 민간구매를 돕는 '2026년 수소차 민간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민간에서 수소승용차를 구매하면 1대당 3,450만 원, 수소고상버스를

구매하면 1대당 3억 8,000만 원을 지원한다.

구매 희망자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차량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제조·판매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보훈수당 인상

전주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보훈수당을 인상키로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 시비지급액에 기존 8만 원에서 10만원으로 월 2만 원씩 인상한다. 그러면 참전유공자는 월 14만원(도 지원금 4만원 포함)을, 그 외 보훈대상자는 월 12만원(도 지원금 2만원 포함)을 받게

된다. 그 외 지원공상군경 및 지원순직군경 등 보훈보상대상자 또한 2만원 인상된 월 6만 원(도 지원금 2만원 포함)을 수령하게 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주시 보훈수당 지원조례' 개정안을 시의회결 등을 거쳐 오는 4월경 공포할 예정이다. 보훈대상자의 실질적인 혜택을 조기에 제공하기 1월부터 소급 적용에 인상 지급 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